



“출연연 단일법인 통합, 조만간 매듭지을 것”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통합되면서 ‘과학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국과위가 출범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을 총지휘하기로 조직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과학정책에서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국과위가 잘해낼 수 있을지, 김차동 상임위원을 만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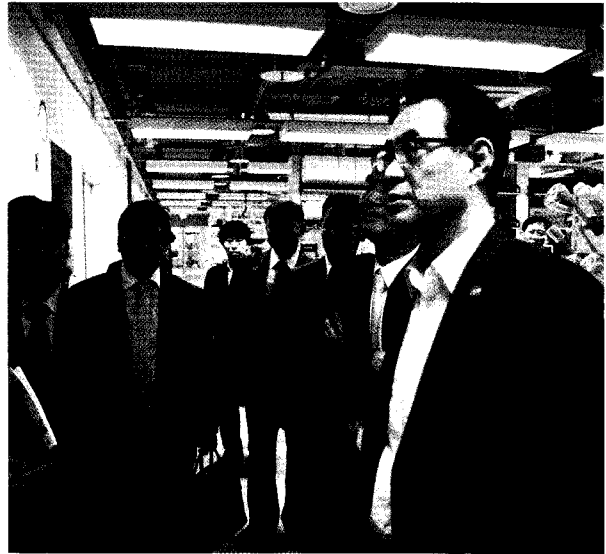
글_이은정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 3월에 국가위 상임위원으로 온지 약 6개월이 지났다. 먼저 소감은? 정확히 지난 3월 28일 임명을 받았는데 새로운 조직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다. 사무실부터 새로 구하고, 조직에 따른 세부 기능을 정립하고,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또 직원도 충원을 해야 했다.

○○○ 아직도 교과부와 국가위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동안은 교과부나 혁신본부 등 부처에서 정부의 R&D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지식경제부(지정부)나 국토해양부 같은 다른 부처에서 '부처가 선수와 심판을 같이 보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지금은 그 임무가 분리됐다. 교과부는 기초과학 육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등 거대과학을 육성하는 정책과 사업 집행의 임무를 맡고 있다. 국가위는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돼 있다. 각 부처별로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고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R&D 측면에서 국가위는 교과부, 지정부 등 16개 부처, 청의 연구개발 예산을 조정배분하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올해 R&D 사업의 결과를 보고 내년에 그 성과를 감안해 반영할 예정이다.

○○○ 국가위 출범 이후 어떤 일을 해왔는가.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한 일에 대해 말씀해달라. 가장 큰 일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작업이었다.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 작업을 시작했고 8개 전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작업을 했다. 특히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해서 1천200억 원을 줄였고, 연구장비 중복도 535억 원을 찾아냈으며,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 181억 원을 절감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 출연기관 선진화 방안이 중요한 과제이다. 원래 국가위 출범과 출연연 단일법인 통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국가위만 생기고 출연연은 계속 논의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매듭짓는 일이 중요하다. 각 기관별로 고유사업을 정하고 핵심 장점 분



▶▶ 한국파스텍 연구소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야를 도출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출연연은 현재까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또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를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연연이나 지역 R&D 현장방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보니 어땠나? 국가과학기술정책이나 R&D 종합 조정 기능, R&D 제도 개선을 충실히 하려면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출연연과 지역 R&D, 산업계, 학계와 간담회를 많이 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지역 R&D가 너무 죽어있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작업하고, 중앙에서 풀어놓은 과제에 무조건 참여해 경비를 따오는 형편이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문제도 있었다. 올해 말까지 R&D 시스템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과기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했는데 교육부와 통합관 이후 교육 행정에 관련한 일도 많이 했다. 과학 분야와 어떻게 달랐나? 교육과 과학기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의 교육열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우리 사회를 성장시킨 양날개인 것이다. 교과부가 출범한 후 교육 분야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 과학기술은 상당히 장기



적인 전망을 갖고 지원하는 행정인데, 교육은 현안이 많고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어 정책의 효과가 훨씬 직접적이고 정책에 대한 반응도 다양각색이라 정책 조정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학교육, 창의교육을 연계하고 연구자의 교육 기부를 확대하며 대학과 연구소의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주요 이슈이다. 이를 위해 옛 과기부와 교육부의 직원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융합해 왔다.

○○○ 국가 전체의 R&D를 통합하는 일은 누구나 동의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부처 간 이견이 많을 듯하다.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나? 과거에 교과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가 R&D를 조정할 때 타부처에서

반발이 좀 있었다. 교과부도 R&D 집행기관인데 왜 다른 부처의 것을 조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처음에 말했던 '선수-심판론'인데 이제 국과위가 생겼으니 우리는 개별 선수(각 부처)가 잘 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 기획재정부가 하던 R&D 배분 조정기능도 우리가 갖고 와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정할 때 기재부가 국과위의 의견을 존중해 거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국과위는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자제하고 중복을 최소화, 효율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조정하고 있다.

○○○ 최근에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방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린다. 국과위의 정책기조는 개방과 협력이다. 부처 간, 연구주체 간, 연구자 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벽을 허무는 것이고 그것이 사업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 단계에서 기존의 각 관계부처가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형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획을 했다. 현재 수소 및 연료전지, 바이오이종장기 두 분야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9월 1일부터 인터넷에 오픈을 했다. 관련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분석 의견을 제시하면 국과위 심층분석팀에서 의견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모든 분야에 도입할 예정이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설립에 대해서도 국과위가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나? 국제과학기술벨트 사업은 과학기술계의 숙원 사업이며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과학벨트 법에 의해 교과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과위는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다. 기초과학연구원에 50개 연구단이 들어설텐데 이 예산 배분에는 아무래도 관련된 일을 하게 되지 않겠나.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상호 역할을 어떻게 차별화, 분담하고 연구 중복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는 국과위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문제가 첨예한 사안으로 있다. 최근에 국과위가 출연연 핵심역량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출연연 거버넌스와는 별개로 출연연 기관 고유사업을 늘리기 위해 핵심 역량 평가를 하고 있다. 먼저 출연연의 임무를 정립하고 그 임무 가운데 강점을 가진 기술 분야를 먼저 조직에 구성해 연구를 집중하라는 취지이다. 1차로 26개 연구기관 가운데 14개 기관의 자문이 완료됐고 나머지 11개 기관은 11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논의가 깊이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 과학계에서는 이공계의 공직 진출이 적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이 좀 더 많이 공직으로 나가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 우수한 이공계 출신들이 공직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제 2차 공직 내 이공계 인력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2010년도의 경우 목표는 신규 채용 가운데 기술직 비중을 40%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30.4%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공무원단의 이공계 비율은 2010년도에 25.8%였는데 2013년까지 3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실제로 교과부,

환경부, 산림청 같은 곳은 기술직이 많다. 하지만 이공계 전공만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학제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 이공계 교육도 융합교육에 맞추어 경제사회 전반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 수립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오랫동안 과학 행정 분야에서 일해 왔는데 우리나라 과학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먼저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연구개발에 헌신해온 과학기술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나라의 오늘날 발전에 과학기술계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 앞으로 과학기술계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문의 편수보다 논문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특허를 내더라도 남들이 그 특허를 인용하고 사고 싶은 특허에 가중치를 주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축적한 지식과 연구개발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돈이 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정부는 그런 문화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T**